

칼럼

김정환 뉴시스 문화스포츠부 차장



중국인 관광객 유치, 찐커로 눈길 돌릴 때다

중국이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해 3월 15일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사실상 급했다. 이후 1년 넘게 흘렀다.

유커, 즉 중국인 단체관광객 러시로 호황을 누리던 관광업계는 난생 처음 살아보는 '금한령' 시대에 적자를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중국은 선물이라도 하듯 베이징,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 한해 금한령을 풀었다. 관광업계는 아쉬워하면서도 방한 유커 규모가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2월 9~25일 평창동계올림픽과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중국 최대

명절인 2월 15~21일 춘제 연휴가 배경에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올림픽 개막 전은 물론 개막 후에도 유커가 올림픽을 보려고 몰려왔다는 소식은 없었다.

금한령 직전까지 "유커를 0000명 유치했다"며 치적용 경쟁적으로 과시하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침묵할뿐이었다.

한국관광공사의 2018년 2월 한국관광통계'를 보면, 한 달 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34만3411명이다. 이 기간 방한 외국인 중 가장 큰 규모이고, 1월의 30만1512명과 비교해도 다소 늘어났다.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의 59만790명에 비하면 41.5%나 줄었다.

결국 올림픽과 춘제라는 양대

호제도 중국인 4만여명을 늘리는데 그친 셈이다. 춘제 기간 65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해외로 갔지만, 이들은 한국을 여전히 외면했다.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전 자비자 발급수수료(1인 15달러) 감면 기간 1년 연장,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1회 이상 방문한 중국인 대상 복수사증 발급 등 '당근'을 제시했으나 소용 없었다.

지난해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관광시장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평창올림픽이 100일 안으로 다가온만큼 관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머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만 할 까닭은 없다. 유커가 한국에 오지 못하는 데도 방한 중국인이 금한령 이전의 약 60%에 이르는 사실에 이제는 주목해야 한다. 바로 찐커, 즉 개별 관광객이다. 짧은층 중심의 이들은 금한령이 서슬퍼런던 작년에도 거리낌 없이 한국을 찾아왔다.

중국이 금한령을 일부 지역에 한해 해제하고, 크루즈나 전세기 이용과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계속 몽니를 부리는 현실에서 전수답처럼 이거나 저거나 유커가 와주기를 기대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차라리 그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찐커를 한 명이라도 더 한국으로 오게 만들고, 이들이 한 번 온 것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오게끔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과거사·위안부·독도영유권 등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과거사·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중심으로 한 동중국해 분쟁 등 역시 갈등이 적잖으나 중국인이 올해 춘제에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찾은 나라, 모두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다.

社說

선거철 '과태료' 주의해야

6·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혼탁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간단한 식사비부터 आय회 교통비,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표심을 사기 위한 수법이 다양하다.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런 호의(?)를 넘겨 받았다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1만~2만원 공짜가 100만 원에 가까운 과태료로 부메랑이 돼 날아올 수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께 기초의원 E씨가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식사(30만원 상당)를 대접 받은 지역 축구협회 회원 20여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선거위 조사를 받았다.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지난 14일(선거 전 80일) 기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64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있는 기부행위 등이 21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위는 212건 중 45건은 고발 조치하고, 8건은 수사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159건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물론 출마 예정자 측의 편의를 받은 사람이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편의를 받은 사실을 지수하거나 선거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과태료를 경감받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선거위는 선거구민 모인 및 행사에 참석해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임후보 예정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 선거철에는 특정 모인 참석 전에 해당 모인의 성적이야 주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寸 咫  
陰 寸  
是 陰  
競 寸

寸陰是競

▷뜻: 한 자 되는 구슬보다도 잠깐의 시간(時間)이 더욱 귀중(貴重)하니 시간(時間)을 아껴야 함.

기고

남정열 순천소방서장



전통시장 작은 관심으로 화재를 예방하자

날씨가 따뜻해지고 생명이 활기를 띠는 봄이 왔다. 이에 따라 계절 음식이 많아지는 전통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시장은 단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곳으로, 물품과 정보가 교환되는 고유기능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무리한 삶을 달래주는 소통 기능도 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로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소풍 공간이다.

그러나 좁은 통로와 출입구, 노후된 시설, 밀집된 점포, 겹겹이

쌓인 가판대 등으로 인해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전개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는 1,700여개의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77건, 사상자 4명, 103여명의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전체 화재 발생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부주의, 원인미상, 기계적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주

변 가연물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주기적인 자체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즉시 초기 진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통로가 협소하고 주변 장애물이 많으면 소방차가 도착해도 진입하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상인들 스스로가 소화기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 하도록 지속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순천소방서에서는 전통

시장 안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인 시장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시장 자율소방대를 조직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들의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영업을 종료한 점포들은 귀가하기 전에 전기, 가스 등을 반드시 차단하여 전열기구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유사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시장 내 무질서한 좌판이나 적치물을 정비하고 사전에 소방통로를 확보함은 물론 주기적인 화재예방 방송과 야간 자율순찰을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져 시장 상인은 물론 이웃주민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전통시장이 항상 추어의 공간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동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장 이흥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